

尹, 계엄 사태 한 달 넘도록 버티기... 국민 피해 '눈덩이'

국민의힘 '방탄' 동조·민주당은 묘수 못 찾아 국정 혼란 장기화 환율 치솟고 주식 시장 혼란·소비심리 위축 ... 서민경제 '추락'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 달 여 지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앞에서 '버티기'에 돌입했고, 여당은 '방탄'에 동조하면서 국정 혼란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부담'만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탄핵 반대 집회 관계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일부 의원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등 여론전을 펴면서 되레 반격을 시도하고, 공수처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여전히 체포하지 못하면서 국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원달러 환율은 치솟고,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등 전 국민을 향한 '계엄-탄핵 정국'이 구체화되면서 서민 경제는 지속적으로 추락 중이다.

◇국민·정치권도 양극단으로 치달아=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연일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밤새 자리를 지키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 탓에 긴장감도 맴돌고 있다.

이들은 은박 담요 등 방한 용품으로 무장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양측의 거리가 가까워 경찰이 기동대 버스 여러 대를 세워두고 울타리도 설치해 둔 상태이다. 한반도의 허리를 관통하고 있는 휴전선 뿐 아니라 탄핵 찬반 진영이 만들어 낸 또 하나의 '경계선'이 서울 한복판에 설치된 셈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로 국민만 분열되고 있다"면서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펼쳐지고 있는 양 극단의 모습은 한국전쟁 전후 극심했던 정치적 갈등을 다시 보는 듯 하다"고 말했다.

◇경제 침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소비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보다 12.3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18.3p) 이후 최대 폭 하락이다.

한국신용평가도 지난 7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 성장에 부정적이다"고 평가했다. 한신평은 이날 웹 세미나 '경기 둔화와 트럼프 2.0의 파고 속 2025 산업별 전망 분석'에서 "정치적 혼란 장기화 시에는 소비 및 기업 투자 심리 위축, 대외 신인도 하락, 기업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밝혔다.

JP모건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1.7%에서 1.3%로 끌어내리면서 경제심리지수가 좋지 않고 내수 불황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경기 침체의 악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정치적 긴장과 경제활동 지장이 장기화하면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고, 포브스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 사태에 대한 비판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시간을 갖고 분할해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여야 '아전인수' 식 법 해석 혼란=정국 불안으로 국민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데 여야는 정치 선행에만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도 부결시키고, 대통령 탄핵 여부를 판단해야 할 헌법재판소를 연일 흔들는 것도 모자라 경찰수사본부장에게 '훗날을 생각하라' 등의 협박까지 일삼으면서 내란 수사까지 방해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불법·위법'이라고 우기며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수사 과정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실연'에도 트집을 잡고 늘어지며 윤 대통령 방탄에 앞장서고 있는 모양새다.

반면, 민주당도 12·3 계엄 선포 이후 한 달이 훨씬 넘었지만 뾰족한 묘수 없이 일부 의원들이 국민의 힘에 쓸데없는 빌미를 주면서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의원이 지난 7일 페이스북에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쓴 데 대해 국민의힘은 '국수분과 내통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다. 또한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최근 법사위에서 "윤석열 사형 당할 것이다"고 발언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아전인수식 정치 선행으로 각자의 주장을 꺾지 않으면서 국민의 답답함만 커져가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기우식 대변인은 "현 상황은 우리사회 권력이 그동안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참담한 모습"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의 대의제 하에서 정치권은 국민을 보호해야 하지만, 비상계엄사태 이후 여·야정치권은 기준에 만들어진 거대한 카르텔에 맞춰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 대변인은 이어 "내란의 위험성을 종결 시키고 민주주의 정체성을 바로세워야 하는 국민적 열원을 들어야 할 정치권이 귀를 닫는다면 국민들의 절저한 응징이 가해질 것"이라면서 "여·야 정치권은 칼바람이 살을 에는 추위에도 시민들이 날마다 거리와 광장으로 모이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광록·정병호기자 kroh@kwangju.co.kr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험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수처·경찰, 오늘尹 2차 체포영장 집행하나 '촉각'

실패 없게 사전 준비에 만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대신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윤 대통령 측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경찰과 구체적인 체포영장 시점과 방법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3일 집행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에 기간 연장을 위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7일 발부받았다.

집행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공수처는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실패가 없도록 하는

대 방점을 찍고 신중하게 집행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앞선 1차 시도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터라 공수처가 곧바로 집행에 나서기보다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고 예상대로 일단 호흡을 가다듬는 상황이다. 다만 1차 집행 시도가 이뤄진 지 일주일이나 되는 데는 만만치 않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하는 대통령경호처 작업이 심화할 수 있는 데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경 지휘부가 이미 대부분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수사만 계속 지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집회 인파가 몰리는 주말보다 평일을 택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시기는 이르면 10일이나 아니면 13일께 등의 관측도 나온다.

이번 집행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3차 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큰 데다 영장 유효기간도 1주일 이상으로 관측되는 만큼 준비에 시간을 더 들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영장 집행은 결국 공수처장과 경찰 지휘부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어 시기 선택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아울러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 사이에 명분 축적을 위한 기싸움도 가열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8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없이) 기소를 하든지 정 조사를 해야겠다"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검토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연합뉴스

"尹 탄핵 인용해 파면해야" 60% 넘어

NBS 조사, "기각해야" 33%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0%대를 기록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6~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대표조사(NBS)에 따르면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62%였다. 반면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3%에 머물렀다.

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응과 관련해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53%를 포함해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5%였고,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0%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22.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